

한·미 “사드체계 일부 한국 도착” 논란

“발사대 포함 일부만 이동... 주한미군 기지 보관 중”... 한미 국방장관 ‘4~5월 배치’ 합의 현실화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전개를 시작했다. 지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방한 때 한미군 국방부 장관과 사드 포대를 무조건 대신 전에 무조건 옮겨놓자고 합의한 것이 현실화 하는 모양새다.

주한미군 사령부와 국방부는 7일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 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이어 “주한미군 사드체계는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는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사드체계는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다층방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국방장관과 미 태평양사령부의 적시적인 사드체계 전개는 주한미군이 증원전력이나 최신 전력을 요청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사대를 포함한 사드 포대 일부는 6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포대는 미 공군의 대형 수송기인 C-17로 옮겨왔다. 이후 주한미군 기지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현재 사드 포대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는 보안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미가 이번 연합훈련 때 사드 포대의 실제 작전 운용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연합훈련을 명분을 내세워 일종의 ‘알박기’를 시도하려는 것



‘헌재 존중’ ‘국민 통합’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정당 비상시국 의원총회를 마친 정병국 대표 등 의원들이 본청 로터리를 계단에서 ‘헌재 존중’ ‘바른 통합’ 피켓을 들고 있다.

아니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드 포대 전부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훈련에서의 실제 운용은 어렵다는 것이 우리 군의 설명이다.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연합훈련 참가하기 위해 사드 포대가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막 전개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는 크게 네 가지 장치로 이뤄져 있다. X-밴드 레이더(AN/TPY-2), 발사대(Launcher), 요격미사일(Interceptors), 발사통제장치(Fire Control) 등이다. 사드 1개 포대는 6개의 발사대에 요격미사일 8개씩을 장착, 총 48기의 미사일을 갖출 수 있다.

사드 노력한다는 기본 합의가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한미 양국 군 당국은 들어온 사드 포대 일부를 주한미군 기지에 보관한 뒤,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사드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최종 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국정원 “헌재 사찰 없었다”

국가정보원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에 대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철우 정보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석한 이병호 국정원장은 “가짜 뉴스가 빠르게 확산돼 굉장히 놀랐다”며 “보도 언론사에 항의공문 보냈고 언론중재위원회 재소도 했다”고 말했다.

이 국정원장은 국정원 국내수집 담당부서에 현재, 법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의 활동유무에 대해 “일반적·통상적인 동향과 약은 한다”고 대답했다.

앞서 4일 SBS는 전직 국정원 고위간부의 말을 인용해 국정원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의 동향 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

“대한 민국의 운명, 이번 주에 달려 있다”

김승환 교육감 “탄핵심판 13일 내 선고돼야... 헌법재판관들에게 힘 실어줘야”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이번 한 주가 우리 국민과 국가에 매우 중요한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탄핵 심판 선고까지) 하루 하루가 정말 긴박한 순간이 될 것이다.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느냐, 여기서 주저 않느냐 하는 것은 이번 한 주 운명의 시계가 결정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정원이 9명인데, 박한철 소장의 정년 퇴임으로 지금은 8명이다. 늦어도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임기 마지막 날인 3월13일까지 헌재가 선고를 해야 한다. 그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판관 숫자가 7명으로 줄어들면 정권은 굉장히 강한 기대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그 중에서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그 중에서 1명만 낙마를 해도 심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결정불능 상태가 된다. 특히 탄핵을 반대하는 단체 내에서 헌법재판관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거나 집회에 위협 물질을 들고 나오는 등 백색 테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교육감은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신변위협을 당해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경찰청에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변경호 요청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진정하게 재판관들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해은 기자

김종인, “민주당 탈당 한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다른 당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전 대표는 탈당일이 불거진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당 할거냐고? 그건 함께해요”라며 “탈당을 비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다. 날짜는 제가 알아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탈당 배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주당에서) 내가 할일이 없어서 탈당한다. 특별한 사유를 드릴 수 없지 않냐”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내가 늘 얘기했다. 어떤 자리라는 것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건데 아무 일도 할 게 없으면 괜히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옳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국민의당 입당설에 대해서는 “어디 당에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지 미리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의원직이 부족했냐’는 질문에 “이번 임시국회(2월 임시국회)를 보면 잘 알실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뉴스

민주당 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는 7일 전주동백웨딩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은 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우창윤 전국장애인위원장과 200여명의 장애인 당원이 참석했다.

김춘진 도당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과거 민주당은 인사 차별을 하지 않은 유일한 정당이었다”며 “정권교체로 우리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자”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우창윤 전국장애인위원장은 “오늘 캐치프레이즈인 장애인의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김형근 전북도당 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 당원동지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민주당이 장애인 문제를 풀어내갈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식전행사는는 전북여성장애인합창단 재능기부가 이어져 많은 박수 받았다. /인재용 기자

김광수, 행자부 방문 특별교부세 확보 활동 펼쳐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활동중인 김광수 국회의원은 7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특별교부세 확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자부를 방문한 김 의원은 홍윤식 장관, 김성열 차관, 심보균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북지역에 대한 교부세 배정액이 대폭 증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가 신청한 특별교부세에 대해 행자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관심을 갖고 ‘전북지역 노인특화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교부세를 신청했다”며 “행자부와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인 만큼 이에 대한 교부세 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재용 기자

국립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국립전주대학교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